

안건6

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

가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

1 현 황

□ 은행권의 저원가성 예금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출 우대금리 항목에 요구불예금 평잔 유지 조건을 도입하려는 사례 증가

- 현재 7개 은행이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(4개 은행\*은 최대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요구불 유지가 필수, 3개 은행\*\*은 선택, 주담대 기준)

\* 예) 최대 우대금리 1.1%(① 요구불예금 평잔 200만원(0.3%), ② 급여 이체(0.3%), ③ 카드 실적(0.3%), ④ 적금 납입 (0.2%)/ 조건 ①~④ 모두 충족시 1.1% 적용 가능)

\*\* 예) 최대 우대금리 0.7%(① 요구불예금 평잔 50~200만원(0.1~0.3%), ② 급여 이체(0.2%), ③ 자동 이체(0.2%), ④ 카드 실적 30~70만원(0.1~0.3%)/ ②~④만 모두 충족하더라도 0.7% 적용 가능)

요구불예금 유지 조건 적용 은행 우대금리 현황(가계대출 기준)

구분	A은행		B은행		C은행		D은행		E은행		F은행		G은행*	
	주담대	신용	주담대	신용	주담대	신용	주담대	신용	주담대	신용	주담대	신용	주담대	신용
기준 (만원)	200	-	100	100	100 ~ 200	100 ~ 500	50 ~ 200	50 ~ 100	100	100	200 ~ 300	50 ~ 100	50 ~ 200	100 ~ 200
우대금리 (%)	0.3	-	0.2	0.2	0.2 ~ 0.4	0.1 ~ 0.2	0.1 ~ 0.3	0.2 ~ 0.4	0.2	0.2	0.1 ~ 0.2	0.2 ~ 0.4	0.1 ~ 0.4	0.35 ~ 0.6
비고*	필수	-	선택	선택	필수	필수	선택	필수	선택	선택	필수	필수	필수	필수

\* 최대 우대금리 적용시 요구불예금 유지 필수 여부

\*\* G은행은 총수신 평잔 기준 충족시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

- 통상 평잔 100만원 이상 유지시 우대금리를 0.2% 제공하나, 일부는 전문직 사업자 대출 등에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(최대 1억원, 0.7%)

- ☑ D은행 신용대출(의사, 약사 등 의료직 종사자 대상)  
(개업의) 대출한도 최대 8억원, 1,000만원(0.1%)~1억원(0.7%)  
(봉직의) 대출한도 최대 3억원, 500만원(0.1%)~1,500만원(0.3%)

- ☑ D은행 신용대출(의·약사 제외 전문직 대상)  
(개인사업자) 대출한도 최대 3억원, 500만원(0.1%)~5,000만원(0.5%),  
(급여소득자) 대출한도 최대 2억원, 500만원(0.1%)~1,000만원(0.3%)

➡ 소비자 보호, 은행의 자율적 경영 판단 등의 측면에서 同 우대금리 항목의 적정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기

## 2 도입 관련 의견

### 가 소비자 보호 측면

- 소비자는 우대금리 요건 충족을 위해 보유 자금 또는 대출금 일부를 요구불예금(금리는 연 0.1% 수준)에 예치할 필요
  - 대출금액이 큰 주담대 차주 등은 대부분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불예금을 예치하고 있으며,
    - \* A·B·C은행의 주담대 차주 중 84.5%가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 충족('24~'25년중)
  -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 도입 이후 은행 내 우대금리 제공 기준(100·200만원)을 상회하는 구간의 요구불예금 비중이 증가
- 일부 은행은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 도입시 기존 우대금리 항목을 대체\*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가했다고 보기 곤란
  - \* H은행은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 도입(0.1~0.3%)시 현행 우대금리 항목 중 적금 납입·자동이체·모바일뱅킹 이용 조건(총 0.3%p) 폐지
  - ※ 현행 금소법상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은 불공정영업행위(꺾기)에 미해당

### 나 은행의 자율성 측면

- 은행은 경영목표 추진 등을 위해 우대금리 항목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우대금리 기준 이행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사항
  - 특히, 저원가성 예금 확보는 은행의 핵심 경쟁력이므로 이에 기여한 소비자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
    - ※ 해외에서는 일정 잔고 이하의 계좌에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존재  
예) BoA : 계좌 유지 수수료 월 \$14, 잔고 \$1,500 유지시 수수료 면제
- 또한,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은 他 우대금리 항목(신용카드 30~70만원 사용, 적금 월 10만원 납입 등) 대비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\*
  - \* A은행에서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 도입 전에도 주담대 차주의 55.4%, 신용대출 차주의 45.9%는 요구불예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유지

## 3 향후 계획

-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에 관한 감독방향을 수립

## 나 중소기업권의 예금계좌 해지 시 연계 체크카드의 해지 절차 강화 방안

- **(현황)** 결제 예금계좌가 해지된 체크카드(이하 '미해지 카드')는 후불 교통카드 등 소액신용 결제 및 본인인증 기능이 여전히 유효
  - '25년 기준, 중소기업권에서 발급된 체크카드 20,249,994개 중 미해지 카드는 122,505개 (0.6%)

- **(위험 요소)** 미해지 카드 결제에 따른 불승인 사례가 매년 증가\*하며 유효한 신용결제\*\* 기능으로 인한 소액연체 및 본인인증 악용 등 잠재적 위험 상존

\* ('23) 41,626건 → ('24) 60,680건 → ('25) 87,755건

\*\*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의 잔고가 부족할 경우 신용으로 결제하는 하이브리드카드(30만원 限)

- ① **(소액연체 위험)** 하이브리드 카드, 후불 교통카드 등 소액 신용결제 기능을 이용 시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\*이 이루어지지 않아, 금융 소비자의 의도치 않은 대금미납으로 인한 연체\*\*가 발생할 가능성

\* 결제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SMS 등으로 대금납부용 가상계좌를 안내

\*\* 10만원·5영업일 이상 연체시 단기연체정보로 등록되어 신용상 불이익 발생

- ② **(본인인증 악용 위험)** 체크카드 정보(카드번호, CVC 등)는 비대면 실명 확인\*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, 분실 또는 도난사고 발생시 명의 도용 등 금융사고(보이스피싱,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등) 위험 존재

\*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추가 인증 방법(타 기관 확인결과)으로 활용이 가능

- **(향후 계획)** 중소기업권에서 예금계좌 해지 시에 체크카드도 함께 해지 되도록 전산통제 체계를 구축하고, 미해지 카드로 결제시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SMS를 통해 해지 안내\*를 실시할 예정

\* (예시) 귀하가 방금 이용하신 체크카드는 결제계좌가 해지된 상태입니다. 계속 사용을 원하시면 결제계좌를 변경하거나, 더 이상 사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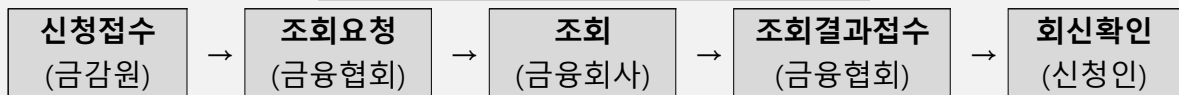
## 다 퇴직연금의 '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' 대상 포함 추진

- **(서비스 개요)** 상속인이 피상속인(사망자)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여러 금융회사 방문 없이 한 번에 신청·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

◆ **(절차)**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각 협회\*를 통해 금융회사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고, 결과를 협회가 회신받아 상속인에게 회신(소요기간은 최대 20일이며, 상속인이 3개월간 각 협회의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)

\* 은행연합회, 금투협회, 생/손보협회, 여신금융협회, 신용정보원, 각 중앙회, 우체국 등

###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절차 흐름도



◆ **(조회 대상)**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(각종예금, 보험계약, 예탁증권 등)과 금융채무(대출,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) 및 공공정보(체납정보 등) 등

- **(문제점)**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(DB, DC)을 회사(사용자) 단위로 계약 체결·관리하고 있어, 개인 명의로 조회하는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퇴직연금 미포함

- 피상속인이 퇴직연금 가입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회사(사용자)를 통해서만 관련 퇴직연금 사업자 및 금액 정보 확인 가능

※ '25년말 퇴직연금(DB, DC) 가입자 수는 790만명(DB 343만명, DC 447만명)이나,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는 경우 가입자 수가 2,821만명(국가데이터처 발표 '25년말 취업자 수)까지 확대될 가능성

### '25년말 기준 퇴직연금(DB, DC) 가입 사용자 및 가입자 수

구분	회사(사용자) 수 (단위:개)	가입자 수 (단위:명)
DB	108,695	3,435,246
DC	433,610	4,468,887
계	542,305	7,904,133

- **(해결 방안)** 퇴직연금 사업자의 시스템을 개편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 단위로 관리 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, 상속인 조회 요청에 대해서는 가입자 단위로 회신

- 다만, 적립금은 지속 변동할 수 있으므로 적립금액은 제외하고 가입여부 및 사업자 정보 등을 회신하며,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토록 안내

※ 교직원공제회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근로복지공단 등도 가입유무 등의 정보만 조회하여 회신

- **(향후 계획)**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사업자와 T/F를 구성하여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편\*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제고

\* 협회 및 사업자의 시스템 전산개발은 6~1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

### ※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관련 시스템 개편 일정(安)

일 정	계 획
~ '26.7월	T/F 구성, 시스템 개발 방향 설정, 애로사항 논의 등
'26.8월 ~ '27.상반기	사용자 및 가입자 단위의 퇴직연금 관리체계 이원화 전산개발
'27.하반기 ~	'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'에 퇴직연금(DB, DC) 포함하여 회신